일제 강점기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192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논문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독자들이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벌였던 다섯 사례를 분석했다. 1924년 ≪동아일보≫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였던 불매운동과 1925년 혁청단의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진남포 객주조합의 ≪조선일보≫ 불매운동, 1926년과 1927년 마산 지역의 유지들이 벌였던 ≪남선일보≫ 불매운동, 그리고 1927년 부강 청년회가 벌였던 ≪조선일보≫ 불매운동이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1920년대 중반 신문 불매운동의 특징으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활발해졌으며 대상 신문도 다양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은 주로 ≪동아일보≫가 대상이 되었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도 나타났으며 지방지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지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서울의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마산과 진남포, 부강, 김천, 부산 등 지방으로까지도 확산되었던 것이다. 신문불매운동이 이루어졌던 배경도 이념투쟁 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 중 1924년의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자신들 집단에 대한 보도 태도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920년대 초반에 비해 수용자 집단의 저변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수용자운동 신문불매운동 신문구독거부운동 수용자론 언론사 일제

* bchae@pusan.ac.kr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1920년대 중반 구체적으로는 1924년부터 1927년경까지 벌어졌던 신문불매운동을 분석한 것이다. 192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 민간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각종 단체들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20년대부터는 수용자 집단이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불매 혹은 구독 거부운동을 벌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신문불매운동은 그 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단지 통사적 서술이나 관련 연구에서 1924년 ≪동아일보≫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매운동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정진석, 1990 ; 배진한, 1988 ; 채백, 1998 등). 이 주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로는 최근에 나온 채백(2003)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이 논문은 채백(2003)의 연구의 후속 논문이 될 것이다. 채백의 논문이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 사례를 분석한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기적으로 그 뒤를 이어서 1920년대 중반에 펼쳐졌던 신문불매운동 사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구독자 집단이 언론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전개 과정과 주체 세력, 배경 요인 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어떠한 집단들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불매운동을 벌였는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전 시기의 신문불매운동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1920년대 중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192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문의 구독 거부 운동이 그 이후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중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 수집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의 논문을 위한 형식적 요건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후 시기의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여기서 불매운동이라 함은 어떤 집단이 특정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구독을 거부한다는 내용, 당시의 용어로는 비매동맹(非買同盟)을 결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경우를 말한다. 물론 불매운동이라고 하면 이러한 결의와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행과 확산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 이 측면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자료상의 문제이다. 비매동맹이 결의, 선언된 이후 어떻게 실행되었으며 그것이 신문의 발행 부수나 기타의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만큼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비매동맹이 결의되고 선언된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언론에서 수용자들이 언론에 대해서 취했던 구체적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당시의 언론이 수용자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동안 매체 중심의 역사에 치중해 왔던 언론사 연구의 시각과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륜' 사건과 불매운동

1) '민족적 경륜' 사건과 불매운동의 전개 과정

1924년 1월 2일부터 5회에 걸쳐 ≪동아일보≫ 지면에 실렸던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설의 요지는 현재의 조선 민족은 일정한 방침 없이 혼란만 거듭한다면서 이것을 집결케 하기 위해서는 일대 단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와 산업, 교육의 3대 결사를 조직하자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설은

타협적 자치론의 입장을 집약한 것이었다(배진한, 1988, 65쪽).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월 3일자에 실린 두 번째 사설에서 "조선 내에서 허(許)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었다. 이 주장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각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 사설이 나가자 여러 단체들이 반대와 비난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동경의 유학생들이었다. 동경유학생 학우회 등 11개 단체는 2월 10일 ≪동아일보≫를 배척하고 성토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포함된 성토문을 작성하여 국내 각지에 발송했다. 성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경유학생 등 ≪동아일보≫ 성토에 관한 건').[1]

> 동아일보사 및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지난 1월 3일 '정치적 결사와 운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오랫동안 악전고투해온 전우들을 저버리고 적진에 투항을 자백하고 말았다. 이로써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 민중의 열렬한 비타협적 운동을 비웃으면서 은연중에 굴종적인 타협운동을 종용하고 있다. …(중략)… 이에 우리들은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일본 제국주의적 자본벌(資本閥)의 전위대를 배척하는 동시에 이 전위대가 동아일보사를 본거지로 활동하는 한 끊임없이 이 ≪동아일보≫를 성토할 것이다

상당히 강도 높게 ≪동아일보≫의 보도와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 성토문에서 동경의 청년 단체들은 사설의 취소와 전체 사회에 대하여 사과할 것, 그리고 논설의 집필자인 이광수를 퇴사시킬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재일본동경조선인유학생여자학흥회, 재일본동경조선교육연구회, 북성회(北星會), 동경조선노동동맹회, 형설회, 노우사(勞友社), 평문사(平文社), 조선무산청년회, 대판조선노동동맹회, 전진사 등의 11개 단체였다. 이중 유학생 단체들은 처음에

---

1) 이 내용은 일어로 된 자료를 번역한 것이라서 원 자료의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었으나 192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한 조선무산청년회나 북성회, 형설회 등은 모두 사회주의 성향의 단체들이었다(김준엽 · 김창순, 1986 참조). 이들 단체들로서는 타협적인 입장을 담은 ≪동아일보≫ 사설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비매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일보≫를 성토하고 배척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북경에 있는 북경한인임시선전회도 성토문을 작성하여 발송했다(최민지, 1978, 127~128쪽). 한편 상해의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 ≪독립신문≫도 '≪동아일보≫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 신문은 ≪동아일보≫가 정치적 결사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만은 회사의 대표자가 나서서 과오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개벽≫도 1924년 2월호에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에 대해 '점점점 이상해 가는 조선의 문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반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해 12월호에서는 '갑자일년총관(總觀)'이라는 제목으로 한해 동안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 一月三日 東亞日報 社說로 發布된 「民族的 經綸」의 一節인 「政治的 結社와 運動」이란 一篇은, 新年 劈頭에 한個의 問題가 되엿다. 卽 政治的 結社의 必要와 運動을 말한 그 中에는 '우리는 朝鮮內에 許하는 範圍內에서 一大政治的 結社를 組織하자'는 主張이 잇섯는바, 朝鮮內에서 許하는 範圍內의 政治的 結社를 하쟈 함은, 결국 參政運動이나 自治運動, 기씻 나아간데야 日本政府를 상대로 하는 平和的 獨立運動을 하쟈함에 지내지 못함이라하야, 日本에 가잇는 朝鮮人 靑年들을 中心삼아, 한창 反駁의 노래가 놉하섯다. 더욱, 東亞報가 이와 가튼 社說을 쓴 것은 한때의 지나가는 말로 쓴 것이 아니오, 그뒤에는 무슨 그러한 政治的 結社를 지으며 잇는바, 그런 結社의 精神을 間接宣言한 것이 그 社說이 아니냐하야, 一般은 더욱이나 그편의 動靜을 注視하여섯다.

이 글은 당시 사회에서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여졌던 일련의 과정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사설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과 그 사설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각계가 주목하면서 반발했던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이어서 1924년 4월 20일에 발족한 조선노농총동맹도 ≪동아일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창립총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조선노농총동맹은 ≪동아일보≫의 그동안 행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민원식이가 경영하는 시사신문에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3가지의 매우 강경한 행동 방침을 정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동아일보≫의 주요 간부와 그 옹호파를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둘째, 비매동맹을 전개하며 셋째, 4월 28일에 국내 각지에서 성토 강연을 일제히 연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자 2면, '반동단체와 방해자는 박멸하고 매장하기로 결의').

이처럼 1924년 연초부터 ≪동아일보≫에 실린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둘러싸고 민족 운동 진영에서는 커다란 반발이 야기되어 각 운동단체들이 ≪동아일보≫를 비난, 성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까지도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민족적 경륜' 사건과 불매운동의 배경

이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1924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연재되었다. 첫 번째는 '민족백년대계의 요(要)'라는 제목이었으며 그 뒤를 '정치적 결사와 운동', '산업적 결사와 운동', '교육적 결사와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산업정치의 관계'라는 제목의 사설들이 순서대로 게재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 번째로 1월 3일에 실린 '정치적 결사와 운동'이었다. 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업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

이 분석했다.

> 그러면 왜 지금에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업나. 그 대답은 가장 단순하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1인이오.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밋헤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 자치권의 운동 갓흔 것은 물론이오 일본정부를 對手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이 잇섯던 것이 제2인이다.
>
>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지금까지에 하여온 정치적 운동은 전혀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엇섯다. 그럼으로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만일 국내에서 한다하면 비밀결사일수 밧게 업섯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하여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천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설이 나오게 된, 그리고 이 사설에 대해서 각계의 단체들이 이처럼 반대하면 불매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1919년 3.1운동이라는 민족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 일제는 식민지배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전의 무단통치라는 탄압 일변도의 정책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우리 민족의 저항의지를 통제, 회유하려는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와 같은 표면적 변화의 이면에서 일제는 민족개량주의 혹은 실력양성으로 집약되는 타협적 문화운동 세력을 양성하여 민족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은밀하게 진행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강동진, 1980 참조).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23년 말부터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송진우를 비롯하여 이승훈과 최린, 조만식, 김동원, 안재홍 등이 모여(≪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자 2면, '양 문제의 진상') 연정회 결성을 협의(≪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자 2면, '반동단체와 방해자는 박멸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타협적 자치론의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면서 우익 민족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 속에서 1924년 초에 ≪동아일보≫의 지면에서 '민족적 경륜'이라는 사설이 게재되면서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조선일보≫는 1924년 4월 22일자에서 조선노농총동맹 총회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쟁사인 ≪동아일보≫가 곤란에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 …(전략)…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에 대하야 작년 사월에 청년당대회가 개최되엿슬때에 비매동맹[2]을 한일도 잇거니와 상해와 동경에 특파되엿든 긔자들이
>
> 우리 민족에게 구타를 당하고 쫏기여 온 일로 보면 ≪동아일보≫ 내막이 엇더한 것을 가히 짐쟉할 것인데 ≪동아일보≫에서는 그래도 후회함이 업시 작년 십이월 이십샤일에는 사장 송진우 김성수 량씨가 시내 모모들과 함끠 명월관에서 모히여 소위 연경회라는 것을 죠직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이만원 가량을
>
> 수합하고자 비밀히 ≪동아일보≫의 지분국을 리용하야 수금계획에 로력하는 동시에 환산 경무국장외 모모 고관 두 사람을 방문하고 상호협조할 일의 량해까지 어더 가지고 그뜻을 션뎐하기 위하야 금년 일월 삼일 사설에 총독정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덕 단결을 하야 정치운동에 힘쓸일을 굉장히 션뎐하엿으며 그 다음에는 리광수씨를 중국에 잇는 안창호씨에게 보내여 량해[3]
>
> 가입할일을 간구한 일도 잇스며 설태희씨를 만주디방으로 보내여 조션독립단들에게 그러한 말을 빗치여보다가 구축이나 다름업는 일을 당하고 도라온 일이 잇는데 이에 의하면 그 신문 자톄가 민원식이가 경영하는 시사신문에 죠금도 다를 것이 업스니 ≪동아일보≫를 박멸기 위하여 현재 그 신문의 중요 간부와 그의 옹호파를 이 사회에셔 매장할 일과 비매동맹을 려행(勵行)할 일과 오는 사월 이십팔일에 죠션안 각디에셔 성토 강연을 일뎨히할 일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동시에 전긔 각파련맹도 성토하기를 가결하얏더라

이와 같은 각계의 비판에 대해 ≪동아일보≫는 그 해 1월 29일자에 실린

---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백(2003) 참조.
3) 이 뒤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되었던 것 같다.

'「정치적 결사와 운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1월 3일자의 사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修辭의 졸렬함에 문제가 있었으며 논법이 불철저했던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조선노농총동맹의 강경한 행동방침이 정해지자 4월 23일자 사설에서는 '조선노농총동맹결의 중 본사에 관한 것에 대하야'라는 제목으로 "만일 本社及本報가 果然 朝鮮勞農總同盟의 調査委員이 報告한 바와 가튼 主義精神과 行爲를 가젓다하면 聲討도 非賣同盟도 도로혀 輕한 罰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실제와는 다르다면서 조선노농총동맹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뒤이어 4월 27일에는 '만천하 독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임원의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취한 사실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최근에 일으러 왕왕 세간에서는 본보에 대한 비난의 성이 들니며 혹은 공공의 단체의사로서 이를 표명한 예가 잇슴은 넓히 조선 전민중의 충실한 표현기관으로서의 본보의 최고 사명에 대하야 본사동인은 日夜悚懼의 感을 不堪하얏든 것이다. 물론 세간의 만흔 비난과 공격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의 오해가 잇는 것도 사실이엇다. 그러나 苟히 조선전민중의 충실한 표현기관으로서의 본보의 사명에 一毫의 허위가 업고 또 업기를 기할진대 우리는 세간의 비난과 공격에 맛당히 경청치 안할수 업스며 또 그 비난과 공격에 대하야 深切한 자성자책의 태도로 임하지 안할수 업섯다.--- (중략) --- 이리하야 본사 동인은 전전긍긍의 태도로 엇더케 하얏스면 일반민중의 여망에 負치 안할가를 日夜碎心한 결과 이제 단연한 결심으로 본사 개혁의 부월을 감행케 된것이다. 이것이 별란에 발표하는 바와 가치 본사 재경중역 전부의 인책 사직을 제1착으로 단행하게 된 것이다. …(후략)…

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아일보사는 4월 25일 임시 중역회의를 열고 재경중역 전부는 아니지만 사장 송진우와 전무 신구범, 상무 겸 편집국장 이상협, 취체역 김성수 장두현 등 핵심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후속 인사는 5월 14일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후임 사장에 이승훈을 선출했으며 그

가 전무와 상무도 겸하도록 했고 주필 겸 편집국장에는 홍명희가 임명되었다(동아일보사 편, 1975, 235쪽).

물론 이때의 인사 조치가 반드시 당시 각 사회 단체들의 비난과 불매운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1924년 연초부터 '민족적 경륜' 사건과 뒤이은 박춘금 사건 등을 겪으면서 내부에서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4월 24일 사원들이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의 불화가 심화되자 이상협을 축으로 하는 간부들과 기자들 상당수가 사표를 제출하고 ≪조선일보≫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정에서 임원들의 교체 이루어졌던 것이다(최민지, 1978, 제4장 3, 4절 참조). 하지만 이러한 인사 조치와 그 배경이 되는 사내 갈등에서 외부의 비판과 불매운동이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족적 경륜' 사건은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분파간 갈등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 이후 총독부가 식민지 내에 타협적 자치론이라는 매판 세력을 육성하려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의 사설로 표면화되었고 그것에 대해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 세력이 ≪동아일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불매운동까지 결의되었던 것이다. 이 ≪동아일보≫ 불매운동으로 동아일보사가 내부 진통을 겪게 되고 인사 조치까지 취한 것을 보면 상당한 압박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3. 혁청단의 ≪동아일보≫ 불매운동

1) 혁청단의 ≪동아일보≫ 불매운동 전개

일제기 청년단체의 하나였던 혁청단은 1925년 6월 28일 열린 제4회 임시총회에서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

선거와 세칙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기타 안건에서 혁청단은 ≪동아일보≫가 그동안 자신들의 단체에 대한 보도 태도가 호의적이지 못했으며 더구나 이날 총회를 보도하면서 단체 이름을 '혁신단'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는 사실을 들어 회원 일동은 앞으로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이 사실을 당시의 종로경찰서는 혁청단의 제4회 임시총회를 보고하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革淸團第四會臨時總會ニ關スル 件').

> 권태휘가 이번의 임시총회에 관한 기사를 동아일보사에 가지고 가서 그저께 기재되었는데 혁청단을 혁신단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하여 그날 이영원이 이 오류를 지적하면서 조속히 정정기사를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정기사가 실리는가를 잘 살펴 볼 것이다. ≪동아일보≫는 그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호의없이 적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고로 금후 우리 단원 일동은 ≪동아일보≫ 비매동맹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위의 경찰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타난 오류를 계기로 하여 그 동안 보도 태도가 자신들에 비호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2) 혁청단의 ≪동아일보≫ 불매운동의 배경

이 혁청단은 원래 서울의 전문학교 및 중학교의 교원들과 종교인들이 모여 1923년 12월 15일에 발기한 단체이다. 당초의 취지는 '풍기를 바로 잡자'는 것이었으며 당면 과제로 '공창 폐지'를 내세웠다(≪동아일보≫, 1923년 12월 17일자 2면, '혁청단 출현').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권태휘(權泰彙), 옥순철(玉順喆), 권오순(權五淳), 최저평(崔底平) 등이었다(조선총독부 경무국, 1930, 136쪽). 그러나 1924년 11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을 개선하면서 사회주의계열의 운동 단체로 성격과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이때 이 단체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조봉암, 김한경(金漢卿), 권태휘(權泰彙)

등의 화요회 계열이었다(김준엽 · 김창순, 1986, 46~47쪽).

1925년 4월 12일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바꾸면서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이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을 보면 이 단체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革淸團第二會定期總會ニ關スル 件').

선언

1. 우리는 확신한다
   소수 자본가를 본위로 하는 현 사회경제조직의 붕괴적 숙명과 대중을 본위로 하는 신사회조직의 진화적 필연법칙을
2. 우리는 서약한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과 정의의 주장을 관철하기까지 희생적 정신과 결사적 분투를
3. 우리는 혁청한다
   구사회의 유전적 의식형태와 현사회의 무질서한 계급전선을

위의 선언을 보면 혁청단이 확고한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선언에 뒤를 이은 강령과 결의문을 보면 "계급문화와 창조적 의식을 보급시키기 위해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 혁청단에 대해 출범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지면에 이 단체와 관련된 기사가 처음으로 게재된 것은 발기인 모임 이틀 뒤인 1923년 12월 17일이었다. 이 날자 2면에서 '혁청단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풍기를 개선할 목적'이라는 것과 우선 '공창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동아일보≫는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이 단체의 활동을 긍정적인 논조로 소개했다. 예를 들면 1923년 12월 21일자에는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반 뜻잇는 인사는 만히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더라"고 끝맺으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12월 23일자에는 '역원까지 선거'라는 제목으로 창립총회 소식을 보도했으며 1924년 2월 6일에

는 '혁청단의 계획, 풍긔혁청에 힘쓰겟다고'라는 제목으로 혁청단의 활동 계획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1924년 2월 7일자에서는 '혁청단 몸으로써 모범이 되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서두에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너무 무관심했음을 지적하면서 혁청단 출범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찬양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첫재는 革淸團運動이 일반사회로 하야금 風紀問題에 대한 注意를 覺醒케하야 연구와 토의의 刺激을 준 것이오. 둘재는 학생 자신 중에서 학생 자신의 풍기를 肅淸하랴는 자각과 노력이 生한 것이다. 모든 개혁은 외적으로 注射할 것이 아니오 내적으로 분비하는 것이니 학생 자신이 학생계의 風紀肅淸을 위하야 자각하고 노력함은 일반사회가 그리함보다도 더욱 실효가 잇슬 것이다. 그뿐아니라 自來로 우리에게 부족한 자립자치적 정신의 발로로 크게 찬양할 가치가 잇는 것이다. …(중략)… 이 목적을 達하는데 중심세력이 되는 것은 혁청단 자신의 단원의 증대와 단결의 공고와 더욱 혁청단원 자신의 實踐躬行의 活模範에 잇슬 것이다. 활모범이야말로 가장 유력하고 웅변적인 主義宣傳이다.

혁청단의 출범 의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러한 긍정적 보도 태도는 혁청단의 성격이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다소 변화를 보인다. 사회주의 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 임시총회가 열렸던 1924년 11월 26일자 지면을 보면 '혁청단 임시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시내 北米倉町 일백사십번디에 잇는 혁청단에서는 금년 봄 총회때에 강령과 선언을 발표하고 공창폐지운동의 방향을 전환한 후에 이래 여러달 동안 오즉 내부정리에 몰두하던 중이더니 요사이에 이르러 졸디에 긴급한 새사건이 발생하엿슴으로 그단에서는 이문뎨를 토의하고자 금일 오후 네시부터 관수동 신흥청년동맹 회관에서 림시총회를 개회한다하며 또한 종래로 인사동에 잇던 사무소를 금번에 전긔 주소로 이전한 것이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전의 우호적인 논조가 사라지고 다소 냉소적인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의 관련 보도들을 보면 대개 혁청단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모임의 내용과 관련된 단신들 위주였다. 그러다가 1925년 6월 28일에 가면 ≪동아일보≫가 이 단체의 임시총회 소식을 알려 주면서 단체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 날짜 2면의 모임란에 소개된 관련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혁신단임시총회 이십팔일 오후 아홉시부터 시내 관수동 구십이번디 신흥청년동맹 사무소내에서 혁신단 림시총회를 연다더라

혁청단의 임시총회를 열면서 이를 '혁신단'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다. 당시 혁신단이라는 명칭은 국내에는 신파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이 있었으며(≪동아일보≫, 1922년 11월 26일자 4면, '신파극혁신단의 의주에서 공연'과 ≪동아일보≫, 1923년 7월 16일자 6면 '신파극 혁신단 회령흥행' 등) 만주의 항일단체 중에도 같은 이름의 단체가 있었다(≪동아일보≫, 1925년 12월 5일 3면, '중국동란과 북만의 대한통의부, 정의부, 적기단, 혁신단등 제단체'). 아마도 담당 기자가 이 단체와 혼동을 일으켰던 것 같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일제 경찰문서에도 언급된 대로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6월 27일 혁청단은 권태휘를 동아일보사에 보내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못된 기사가 나갔던 것이다.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혁청단의 이영원(李英遠)은 신문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정정 기사를 신속히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정정기사를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실제로는 싣지 않았다('革淸團第四會臨時總會ニ關スル 件'). 이에 혁청단 그날 저녁에 열린 총회 자리에서 이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성토하면서 급기야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혁청단이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은 ≪동아일보≫의 논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혁청단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보도 태도에서 논조가 바뀌었던 것은 혁청단의 성격이 바뀐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초창기의 혁청단이 공창 폐지나 풍기 등의 윤리 문제에 주력한 것은 당시 타협적 자치론의 입장에 서있던 ≪동아일보≫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 단체로 성격을 전환하고 특히 화요회 계열이 주도하게 되자 ≪동아일보≫의 관심이 그만큼 희석되었던 것이고 혁청단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동아일보≫가 혁청단 관련 기사에서 단체명을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자 불매운동을 결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진남포 객주조합의 ≪조선일보≫ 불매운동

1) 진남포 객주조합의 ≪조선일보≫ 불매운동의 전개

1925년 11월에는 진남포의 객주조합이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동아일보≫ 1925년 11월 21일자 5면을 보면 '兩端으로 非難밧는 南浦客主組合'이라는 제목으로 진남포의 객주조합이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벌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객주조합의 불매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바로 밑의 부제에서 "야적곡 수직료를 올려서 말성되고, 사실보도한 신문을 배척하야 말성"이라고 언급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진남포물산객주조합은 11월 13일 70명 조합원 중 삼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조선일보≫ 비매동맹을 단행하기로 결의하는 동시에 동일보 진남포지국에서 후원하는 사업에까지 절대 불찬성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진남포 객주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구했다. 중개조합과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자긔네와 동일한 보조로 ≪조

선일보≫ 배척을 실행케" 촉구했다. 이처럼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가자 진남포 지역의 기자단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세 조합에 공개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평안남도 진남포 지역에서는 객주조합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사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진남포 객주조합의 ≪조선일보≫ 불매운동의 배경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조선일보≫ 1925년 11월 6일자 2면에 실린 기사였다. 이 기사는 진남포 객주조합이 조합 운영비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야적 보관료에 해당하는 수직료를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수직요금 증액은 조선 상인의 자멸책"이라는 제목과 함께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창고 보관료를 높인다면 고객을 다른 지방에 빼기게 될 뿐 아니라 일본 상인들만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 기사 외에도 남포 지역 유력자 홍광희, 객주조합 평의원 이종섭, 조합원 권정민, 조합 총무 조정호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실었다.

이 기사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문제삼아 진남포의 객주조합은 ≪조선일보≫ 비매동맹을 결의했던 것이다. 조합의 입장은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 긔사의 내용이 사실무근은 아니나 자멸이란 너무도 가혹하다 하야 그 가치 비매동맹을 행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뒤인 1925년 12월 10일 ≪매일신보≫는 이 사건에 대한 속보를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비매동맹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이 사건이 오기주라는 인물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 빚어졌던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鎭南浦客主組와 仲介組에서 朝鮮日報非買同盟을 決議하얏다함에 대하야 자세한 내용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 이유는 吳基周君의 偏見으로 인하야 사회의

오해를 招케함이라는데 잇고 更히 오군은 그 過失을 撫蔽하고저하는 태도가 잇슴이라 하는데 (一) 오군은 일반의 비난이 공개될가하야 경성에 가 잇는 시대일보지국장 이영익씨에게 자기에 관한 기사를 게재치안토록 한것 (二) 일반은 물론이오 기자들도 존재를 부인하는 기자단의 명의로써 공개장을 객주조에 송치하야 은연히 강압의 태도를 보인것 (三) 부내 유력자요 겸하야 객주조 중역인 마재곤씨를 비밀히 방문하며 자기가 과실이니 무사히 결말되기를 청한 것 등이라 한다. 고로 일반인사는 오군의 비겁한 행동을 唾罵중으로 空氣頗히 긴장하여 철저히 오군을 징계할 터이라고 전하더라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기주 개인이 큰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기주라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계획하고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오기주라는 인물은 그즈음 진남포의 노동조합 간부로 있었던 사람이다. ≪조선일보≫ 1925년 12월 25일자 지면을 보면 "지난 20일 새벽부터… 진남포 노동조합 간부 安錫祚, 오기주, 金根永, 全基星, 李永福 梁柱淵 씨 등을 검거하는 동시에… 가택수색까지하야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보면 사건은 매우 중대한듯하며 경찰 당국에서는 내용을 절대 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한 것은 알수업더라"고 보도하고 있다. 오기주를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종의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오기주가 검거된 것은 아마도 공산당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오기주라는 인물이 후에 1928년 8월 제3차 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는데(≪조선일보≫, 1932년 12월 5일자 2면, '3차 공산당사건의 오기주 출옥') 1925년 12월경에는 일본 경찰에 의해 제2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대한 검거 선풍이 전국적으로 몰아 닥쳤던 때이다(김준엽 · 김창순, 1986, 361~374쪽). 따라서 이때에 오기주가 체포된 것도 이 검거 선풍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진남포의 ≪조선일보≫ 불매동맹 사건은 일단 이권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제가 되었던 ≪조선일보≫ 1925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원래 이 수직료를 거두어서 그 중의 일부를 그 지역의 객주조합과 중개조합, 노동조합 등이 수입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수직료를 인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 단체들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오기주라는 인물이 주도하여 불매운동이 펼쳐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 ≪남선일보(南鮮日報)≫에 대한 마산 시민들의 불매운동

1) ≪남선일보≫ 불매운동의 전개

1926년과 1927년에는 경상남도 마산에서 지역의 일문신문 ≪남선일보≫를 대상으로 하는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1926년 7월 24일 마산 지역의 유지들은 모임을 열고 ≪남선일보≫에 대해 불매운동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동아일보≫, 1926년 7월 27일자 4면, '부민대회준비').

1. 부윤에 대한 기사 전부를 취소할 사(事)와 공(共)히 사죄광고를 낼 일
2. 2호활자로써 제1면에 일주간 변명기사를 낼 일
3. 우[4] 조건에 불응하는 동시에는 좌의 조건을 실행하기로 결의할 사
   가. ≪남선일보≫ 비매동맹 및 월정광고를 폐지할 사
   나. 납량전람회 임원을 전부 사임할 사
   다. 5천호 축하광고금 전부를 취소할 사
   라. ≪대판매일≫ ≪대판조일≫ ≪경성일보≫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신문≫에 설명문을 낼 사
4. 도청에 변명문을 타전할 사

---

4) 당시 신문은 세로짜기였기에 앞의 두 가지 조건들이 우측에 기재되게 마련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부윤에 대한 기사가 문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윤 관련 기사에 대하여 사죄광고와 1주일간 해명 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 하겠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매동맹과 광고 취소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마산유지회의 결의 내용이다.

≪남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이듬해인 1927년에도 비매동맹이 전개되었다. 이때에는 우체국 이전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 ≪조선일보≫ 1927년 9월 1일자 4면을 보면 마산 지역에서 우체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구마산 지역과 신마산 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선일보≫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8월 29일 오후에 개최된 선일인유지자(鮮日人有志者) 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남선일보≫(마산의 일문지)는 공정한 사명을 무시하고 한편에 치우쳐 구마산을 언제나 적대시하야 함부로 사업을 방해함에 대하야 적극적으로 경계하기 위하여 월정 광고의 신탁을 거절하는 동시에 비매동맹을 단행하되 9월 1일부터 차를 시행할 것

≪남선일보≫가 편파적인 보도 태도로 구마산 지역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광고 거부와 비매동맹을 단행키로 결의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체가 된 집단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포함된 유지 모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유지 모임은 그해 9월 2일에도 마산의 ≪동아일보≫ 지국에서 다시 회합을 갖고 남선일보사로부터 "영구적 회개의 사과가 잇기 까지는 단호히 용서치 안홀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927년 9월 6일자 4면, '≪남선일보≫ 기사에 구마산측이 분개').

이처럼 1926년과 1927년 두 번에 걸쳐 마산 지역에서는 지역 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일어판 신문인 ≪남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남선일보≫ 불매운동의 배경

그러면 이때에 어떤 배경에서 ≪남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1926년의 불매운동은 당시 마산부윤에 대한 평가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즉, 마산부윤 데라시마 도시히사(寺島利久)에 대한 논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27일자 4면을 보면 '부민대회 준비'라는 큰 주제목과 '모보(某報) 기사에 부민 모욕 이유, 마산 유지회의 결의'라는 부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마산에 위치한 ≪남선일보≫가 그해 7월 22일부터 3일간 마산부윤 데라시마에 대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사실을 토대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부윤이 ≪남선일보≫가 "5천호 기념사업으로 마산을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영리를 도득(圖得)코저하는 소위 마산납량물산전람회를 개최하랴함에 부윤이 성의로써 원조하야 주지 안는다는 등 조건을 거하야 중상하는 공격문을 기재하는 동시에 마산부민의 부윤 반대열이 팽창하다 운운"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계기가 되어 그 동안 이 신문이 신문의 사명과 위신을 망각하고 사리만 도모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마산 지역의 유지 50여 명이 1926년 7월 24일 회합을 갖고 ≪남선일보≫를 규탄하는 부민대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결의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선일보≫라는 신문의 성격과 당시 마산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부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남선일보≫는 1916년 ≪마산신보≫가 개재한 것이다. 합방 전인 1908년 10월 1일 마산에서 일어신문으로 창간을 인가받은 ≪마산신보≫가 경영난에 빠지자 1916년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가 이를 인수하여 ≪남선일보≫라 개재하고는 10년의 기한부로 일본인 오카 요이치(岡庸一)에게 위탁경영케 했다. 1926년 이후로는 일본인 가와타니 시즈오(河谷靜夫)가 인수하여 그 제호 그대로 발행했던 신문이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 1985, 861쪽).

이러한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신문은 철저히 총독부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었다. 1922년 일본 오사카의 한 신문사가 한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본사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남선일보≫는 특정 정당과 밀착된 관계는 없지만 철저하게 부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어용(府御用)'이라고 되어 있다(김규환, 1978, 207쪽에서 재인용).

1929년경의 총독부 경무국의 자료에 의하면 ≪남선일보≫는 국내 발행 부수가 1,021부에 불과한 소규모 신문이었다. 독자들도 대부분 일본인으로서 980명이 일본인 독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학연구소 편, 1974, 56쪽).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으로서 규모가 큰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부터 마산에는 일본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어 조계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마산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이 마산의 상권을 서서히 장악해 가면서 이 신마산이 마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신마산과 구마산,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빚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산 부윤 데라시마는 부임 이후 앞으로 마산의 발전은 오동동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견하면서 구마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를 활발하게 펼쳤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구마산 부윤'이나 '도로 부윤'이니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는 것이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 1985, 99~101쪽).

당시 마산부윤 데라시마는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으로서 아오모리현(青森縣)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06년부터 통감부 소속으로 발령이 나서 경찰부와 지방부, 그리고 부산 등에서 근무하다 1922년 마산 부윤으로 발령이 난 사람이다(田內武, 1925, 981쪽). 전형적인 관료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마산부윤 데라시마가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구마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썼는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인용한 『마산시사』(1985, 101쪽)도 그가 구마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든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조

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구마산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자 이것이 일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남선일보≫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되어 부윤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나오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남선일보≫의 논조에 대해 구마산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지들과 일부 일본인들이 힘을 합쳐 ≪남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펼쳤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1927년에는 우체국 이전 문제와 이에 관한 보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일보≫ 1927년 9월 1일자를 보면 당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馬山府는 경남의 樞要地帶로서 목하 시설로 보면 소수 일본인이 거주하는 신마산은 편중히 하고 다수 조선인이 거주한 구마산 일대는 넘어 경홀(輕忽)히 함으로 이에 불평을 가진 구마산측 유지 다수가 그 대책을 토의한 결과 위선 과반(過般) 부협의회에서도 숙제가 되어 잇든 우편국 이전문제로 黃甲周 金轍斗 松原早滅씨 등을 선거하야 정무총감과 체신국장에게 진정케 하엿든바 去26일 오후4시부터 당시 석정구락부회관내에 다수 인사가 회합하야 그의 전말 보고를 밧든 중 去番 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경하엿든 寺島 마산부윤의 태도가 넘우나 애매할 쓴아니라 신구마산의 주민에게 우편국 위치를 신구마산의 중앙되는 위치에 이전하도록 교섭 청원할 것을 약속하엿슴에 불구하고 상경한 후에는 태도를 일변하여 신마산 역전으로 교섭하엿슴을 알게 되자 일반은 크게 분노하여 …(후략)…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27년의 불매동맹에서는 신문의 특정 기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우체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신마산과 구마산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 동안 누적되었던 양 지역의 갈등이 폭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러한 우체국 이전문제가 ≪남선일보≫ 불매운동으로 비화되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조선일보≫, 1927년 9월 6일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날짜 4면에는 이 불매운동의 배경을 알려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마산의 지방신문으로 본사를 신마산에 둔 남선일보사는 신마산의 시설이 窮奢極侈로 最善히 정도에 運하얏슴에 불구하고 시민의 4분지 3 이상이 거주할 뿐 아니라 겸하야 상업의 중심지인 구마산에 부 당국으로서의 塞責的 사소한 시설을 加하랴함에도 언제나 방해의 논조를 발하야 위정 당국자의 두뇌를 현혹케하는 일방으로 구마산측의 府議及道議등 행정의 諮問에 當한 某某氏를 무조건으로 중상하야써 공정한 신문의 정신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수일 전에 구마산유지자회의를 열고 該紙의 구독을 거부할 것과 월정광고의 揭載 거절할 것을 결의하얏다 함은 旣報함과 갓거니와 該日後는 去1일 지상에 정정당당히 싸흐겟노라는 問題알에 구마산 전 시민을 모욕하는 기사를 장문으로 게재하엿슬뿐아니라 마산 상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棧橋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마산에 시설함을 방해하겟다는 의미의 문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엿다하야 이에 분개한 구마산측 유지 30여명은 거2일 오후 8시부터 당지 만정 동아일보지국에 회합하야 김용환씨 사회하에 해사로부터 영구적 회개의 사과가 잇기까지는 단호히 용서치 안흘 것을 결의하고 동11시에 산회하얏더라

위의 내용을 보면 신 구 마산 사이의 갈등에서 ≪남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일본인 중심의 신마산의 입장을 대변하며 구마산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일삼았던 것이 불매운동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마산 시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매운동을 결의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윤의 입장이다. 앞의 1926년 사건에서는 부윤이 구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남선일보≫의 비판적 논조를 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해의 사건에서는 부윤이 입장을 다소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윤은 신마산과 구마산의 갈등 사이에서 신축 우체국의 위치를 중간 지점으로 하려 했으나 서울에 다녀오고 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5]

---

5) 이때 신축 우체국은 결국 신마산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30년 2월 24일 신마산에 해당하는 중앙동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1926년과 1927년의 ≪남선일보≫에 대한 두 차례의 불매운동이 당시 지역 사회내의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빚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생활 근거지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면서 이에 대한 신문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느끼게 되자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신문 불매운동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이다.

6. 부강청년회의 ≪조선일보≫ 불매운동

1) 부강청년회 불매운동의 전개

1927년 9월에는 충북 부강의 청년단체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문제삼아 이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1927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芙江各團內幕, 湖西記者團서 調査?'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 京釜線芙江에는 芙江青年會와 芙江保安組合(警察署長의 指揮下에서 監督을 밧는 團體)과 勞働同盟의 三個團體가 有한바 去九月二十四日附 朝鮮日報 啄木鳥欄에 '芙江青年會諸君에게'라는 記事로 因하야 芙江青年會에서는 朝鮮日報 非買同盟을 斷行하는 同時에 勞働同盟委員으로 青年會會員인 柳東氣, 朴在雲兩君을 除名處分하고 따라서 保安組合과 步調를 一致히하야 勞働同盟과 波動的風波가 일어나게 되야 青年會와 保安組合에서는 集會時에 新聞記者의 傍聽을 無條件으로 拒絶하는 等 여러 가지 不祥事가 連出하야 芙江一帶에서는 物論이 자못 沸騰하여짐으로 湖西記者團에서는 前記各團體의 內幕을 徹底히 調査하기로 決議되야 不日內로 特派員을 派遣하기로 하엿다더라(鳥致院).

1927년 10월 초순을 전후하여 부강 지역에서는 청년회와 보안조합, 노

1985, 633쪽).

동동맹이 중심이 되어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관련 기사 때문에 ≪조선일보≫에 대한 비매동맹을 결의했음을 알 수 있다.

2) 부강청년회 불매운동의 배경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啄木鳥'라는 제목의 난에 실려 있다. 이 난은 독자투고를 게재하는 난으로서 난의 제목 아래 쪽에는 '투고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14字50行以內 要住所氏名明記"라고 투고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의 기사는 '柯夢'이라는 필명으로 투고된 원고로서 부강의 단체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불매운동을 자극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기사의 내용은 "현재 보안조합장으로서 소관경찰서장의 지휘를 밧는 윤○○군이 부회장의 지배하에서 會務를 진행한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대적 추세를 조칠 가능성이 잇는 청년들을 장차 어느 굴엉(巷)에 쓸고 드러갈는지 疑訝의 感이 不無하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 이어서 이 조합의 규약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오늘날 芙江에서 독갑이 탈을 쓰고 생긴 보안조합이란 것이 잇는바 그 規約을 볼때에 경찰서장의 지휘하에서(各條) 그 부락에 거주자는 모다 조합원이 되라는 복종적 규약이 잇다. 그려한 조합의 수뇌자로서 芙江青年副會長에 선임되어 그의 지배하에서 회무를 진행한다하니 이 어찌 矛盾撞着이 안이고 무엇이냐 아-芙江青年諸君이여 覺醒할지여다

특히 지역 거주자 모두가 회원이 되도록 규정해 놓은 규약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는 부강 청년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단체다운 단체를 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끝맺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사는 부강이라는 지역의 청년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가몽이라는 필명의 필자는 부강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이 지역 단체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동아일보≫ 기사에서 부강의 청년회가 유동기와 박재운 두 사람을 제명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제명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글을 직접 투고했거나 아니면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부강 지역의 ≪조선일보≫ 비매동맹은 신문 지면의 독자투고 내용을 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인 사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직 내외의 이해관계 속에서 신문 지면을 이용하여 상대 세력을 비판하자 이를 계기로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7. 맺음말 : 1920년대 중반 신문불매운동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

지금까지 1920년대 중반에 수용자들이 벌였던 신문불매운동의 다섯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사례들의 특징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1920년대 중반 신문불매운동의 특성

주체	시기	지역	대상 신문	보도 매체	특징
각지의 운동단체	1924년 상반기	전국 및 해외	동아	조선 개벽	'민족적 경륜' 사설을 둘러싼 갈등
혁청단	1925년 6월	서울	동아	-	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과 오보
진남포 객주조합	1925년 11월	평남 진남포	조선	동아 매일	특정 기사에 불만
마산의 지역유지	1926년 7월 1927년 9월	경남 마산	남선	동아 조선	지역내 이권을 둘러싼 보도 태도 불만
부강 청년회	1927년 10월	충북 부강	조선	동아	특정기사(독자투고)에 불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펼쳐졌던 다섯 가지 사례였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외에도[6] 1925년 11월 김천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사실(≪동아일보≫, 1925년 11월 22일자 4면, '조보비매동맹')[7]도 있으며 1925년 12월에 부산

6)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분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본 논문의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7)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 ≪조선일보≫ 김천 지국 경영자가 대서인과 종교신자라 하야 군내 6개 단체가 연명하야 동보 본사에 지국 경영자를 변경하라는 제의안을 제출하엿다함은 누보한바어니와 동보 본사에서는 지금까지 하등의 처치가 업슴으로 該 6개단체에서는 더욱 분개하야 去 19일 오후 8시부터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일보≫ 비매동맹 실행의 건을 토의하엿다는데 그 상세한 결의 사항은 좌와 如하다고(김천)

1. ≪조선일보≫ 비매동맹 실행의 건
   1) 실행방법 본월 20일부터 향 1주일간 실행위원 2人式 동 지국 구역 내의 각 지방에 파견하야 해 지방의 市日을 이용하야 선전할일 단 20일은 김천 시일인 고로 실행위원이 총출장하야 시내에 선전지를 撒布할일
   2) 지방순회 순서 21일 구미, 22일 선산, 23일 梨川, 24일 지례
2. ≪조선일보≫ 성토의 건
   1) 방법 강연
   2) 시일 본월 26일
   3) 회수 1회
   4) 장소 금릉청년회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국장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불만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 같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례보다도 불매운동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관내 각 지역의 장날을 이용해서 대중선전을 함으로써 그 기반을 확대시키고 참여를 넓히려 시도했던 것이다.

의 영주구락부도 특정 신문에 대해 비매동맹을 벌인 사례도 있다(≪시대일보≫, 1925년 12월 17일자 3면, '부산청년경고')[8] 이밖에도 아직 발굴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20년대 중반 신문 불매운동의 특징으로는 일단 사례가 전 시기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채백의 연구(2003)에 의하면 1920부터 1923년 사이에는 2개의 신문 불매운동 사례가 있었을 뿐인데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 최소한 7개 이상의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상 신문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은 2건 모두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도 나타났으며 지방지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그만큼 불매운동의 대상 신문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서울의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마산과 진남포, 부강, 김천, 부산 등 지방으로까지도 확산되었던 것이다.

불매운동 사실을 보도한 매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불매운동이란 것이 성격상 신문에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기에 해당 신문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신문의 보도나 기타의 정보원에 의해서 알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1920년대 중반의 불매운동 사례들을 보면 대개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은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반대로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은 ≪동아일보≫가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초반과도 대조적인 양상이다. 채백의 연구(2003)에 의하면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 사례는

8) 이 기사에서는 대상이 된 신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문'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부산청년연맹이라는 단체에 참여하는 문제로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의 초점이 된 인물이 이 신문의 지국장을 맡고 있던 노○○이며, 이 신문이 부산의 청년단체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매일신보≫만이 보도를 했으며 ≪조선일보≫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두 신문이 서로 상대방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면에 보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초반과 중반이 언론계 내의 분위기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창간 초기에는 이른바 '민족 진영'의 신문으로 출발한 ≪동아일보≫에 비해 ≪조선일보≫가 여러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에 오면서 ≪동아일보≫는 민족적 경륜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입지가 축소되고 반면 ≪조선일보≫는 경영진이 바뀌면서 여러 측면에서 혁신을 시도하면서 입지가 강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가 두 신문의 경쟁 의식으로 나타나면서 상대방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말이다.

신문불매운동이 이루어졌던 배경들을 보면 1920년대 초반에는 주로 이념투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었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 중 1924년의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자신들 집단에 대한 보도 내용과 태도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념에 의한 불매운동이 줄어든 것은 1920년대 초반에는 새로운 이념의 도입으로 민족 운동 진영에서 대립과 투쟁이 많았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일제의 사상 탄압도 강화되어 이러한 대립과 투쟁이 줄어든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920년대 초반에 비해서 수용자 집단의 저변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개벽≫이 1924년 1월호(37~38쪽)에서 "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다면 반드시 비매동맹을 하거나 또는 성토"를 하기 때문

에 "언론이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했던 말이 결코 과장이나 허언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 정도로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이 빈번하고도 직접적인 수용자 운동 형태가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신문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초창기라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에 이처럼 독자들의 신문 불매운동이 어느 면에서 보면 현대보다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이는 당시 독자들의 적극적인 인식이 현대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적극적 수용자론 혹은 수용자운동의 뿌리가 초창기 언론부터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서울: 한길사.

김규환 (1978). 『일제의 대한 언론 선전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김준엽·김창순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서울: 청계연구소.

동아일보사 편 (1975). 『동아일보사사 권1』. 서울: 동아일보사.

마산시사편찬위원회 (1985). 『마산시사』. 마산: 마산시.

배진한 (1988). 1920년대 조선·동아 두 신문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0). 『고등경찰관계연표』. 경성: 조선총독부 경무국.

채 백 (2003).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2, 가을, 249~272.

_____ (1998).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편. 『21세기 미디어산업의 전망』. 서울: 한울, 269~318.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田內武 (1925). 『朝鮮始政15年史』. 인천: 조선매일신문사.

한국학연구소 편 (1974). 『일제치하 언론출판의 실태』. 서울: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동경유학생 등 동아일보 성토에 관한 건', 일제 경성지방법원 편철문서 검찰행정사무에관한기록(1). 京鍾警高秘第1851號의 2, 1924. 2. 22. Available: http://kh2.koreahistory.or.kr

'革淸團第四回臨時總會ニ關スル 件', 일제검찰편철문서 검찰사무에관한기록(2). 京鍾警高秘 第7053號의 1, 1925. 6. 29. Available: http://www.koreanhistory.or.kr/

'革淸團第二回定期總會ニ關スル 件', 일제 경성지방법원 편철문서 검찰사무에관한기록(1). 京高秘 第1762號, 1925. 4. 15. Available: http://kh2.koreanhistory.or.kr/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개벽』

(최초투고 2004.11.17., 최종원고 제출 2005.01.04.)

Audience's Boycott Movement to the Korean Newspapers in the mid-1920s

Baek Cha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cases of audience's boycott movement to the Korean newspapers in the mid-1920s. Five historical cases from 1924 till 1927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se cases have a few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the early 1920s. Firstly, the boycott movement was activated considerably, and the target of movement was diversified. The number of cases in early 1920s was only two, and the target of both cases were The Dong-A Ilbo. But we could confirm at least 7 cases in mid 1920s through this study. In addition to The Dong-A Ilbo, the target included The Chosun Ilbo, and The Namsun Ilbo published in Masan. The location of the movement was not restricted to Seoul. It was also executed at the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such as Masan, Jinnampo, Bugang. The analysis of the context of the boycott reveals that most cases were caused mainly by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parties. Some parties that dissatisfied with the coverage of a newspaper resolved and executed the boycott to that newspaper.

Keywords : audience movement, boycott movement, media history, audience